

이슈브리프 837호
(2026. 5. 4)

한미간 핵추진잠수함 및 핵연료주기 협력 이행이 시급하다

제837호

프레드 플라이츠(Fred Fleitz)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자문위원)



국문초록

한미 양국 정상외 핵기술 협력 합의는 한미 안보협력의 획기적 이정표로서, 한반도 안보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중대한 전략적 전환이다. 특히 핵추진잠수함(SSN) 도입과 핵연료주기 협력(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은 북한 핵능력 고도화와 중국 해군력 확장이라는 이중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글은 한국이 핵연료주기 완성을 확보해야 하는 전략적 필요성과 산업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한미동맹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연계하여 평가한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핵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비확산 원칙과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동맹 기반 억지력 강화에 기여함을 강조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의하여 조속한 기술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주제어 : 한미 핵협력, 핵추진잠수함(SSN), 핵연료주기, 한미동맹, 인도태평양

한미 핵기술 협력 합의의 전략적 의미

최근 한 한국 학자는 필자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혁신적 핵기술 협력을 열정적으로 지지한 것은 "닉슨의 중국 방문(Nixon goes to China)"에 비견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는 평생을 반공주의자로 살아온 리처드 닉슨이 1972년 획기적인 결단을 내려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듯이, 진보 성향의 지도자인 이재명 대통령 역시 기존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 벗어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평화적 핵연료 재처리 협력을 골자로 하는 미국과의 주요 전략적 합의를 체결했다는 의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과감한 것은 단지 한국 내 강력한 반핵 세력에 맞섰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 행보는 그가 일관되게 추구해 온 대북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실용적이고 거래적이며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해 왔는데, 이는 상당수 전문가들의 예측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관세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마찰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양측은 국방, 첨단 핵기술, 그리고 역내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크게 심화시켜 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 신뢰 관계는 2025년 8월 이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그리고 같은 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마련된 양자 회담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3월 워싱턴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건설적인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을 통해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공약이 진전되었고, 양국 무역 협정 협상의 모멘텀이 이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재접촉하는 방안에 대한 유익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안보환경 변화와 핵추진잠수함(SSN) 도입의 필요성

이재명 대통령의 핵역량 강화 추진은 전략적으로 긴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2025년 12월, 북한 김정은은 한 조선소에서 완성된 8,700톤급 '핵추진 전략유도미사일잠수함' 선체를 시찰하면서 이를 북한 해군 핵전력의 중대한 진전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재명-트럼프 대통령의 핵기술 협력 합의는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전략적 현실에 대한 뒤늦은 인정이라 할 수 있다. 즉, 한반도에 핵무장을 한 적대 세력이 존재하고 중국 해군이 급속히 현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더 이상 재래식 디젤-전기 잠수함만으로는 억지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이다.

수십 년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을 운용해왔다. 한국의 KSS-III급 잠수함은 정숙성이 뛰어나고, 수직발사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로 중무장되어 있으며, 첨단 공기불요추진(AIP)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눈부신 자체 기술 개발의 산물이다. 한국은 KSS-III의 수출형 모델인 KSS-CPS를 캐나다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디젤-전기잠수함은 중대한 한계를 지닌다. 작전 항속거리와 해상 체류 시간이 디젤 연료에 의해 제한되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면으로 올라와야 한다. 따라서 잠항 지속 시간은 길어야 수일 또는 수주에 불과하다. 한반도 주변의 얕고 협소한 해역에서, 그리고 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유사시에, KSS-III 잠수함은 탐지에 취약하며 오늘날 해상 억지력 유지에 필요한 지속적·고속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도입은 이러한 전략적 구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연료 제약 없이 수 개월간 잠항을 유지하면서 고속 항해를 지속할 수 있고, 광범위한 작전 환경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한국에게 이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미 성장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잠수함 전력은 한국의 방위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제1도련선 너머로의 세력 투사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팽창하는 잠수함 전력은 그보다 더 큰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핵추진잠수함이라는 전략적 도약을 추진할 충분한 산업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K-조선 빅3'로 통칭되는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은 세계 최정상급 조선사로, LNG 운반선, 해양플랜트, 첨단 군함 건조 등 고부가가치·기술집약적 선박 분야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이미 KSS-III를 비롯한 세계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을 설계·건조하고 있으며, 미국 조선소에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한화오션의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조선소 인수이며, 동사는 역량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50억 달러 현대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미국의 해군 핵추진 기술 이전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오른 한국 조선산업의 기술적 고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연료주기 확보의 전략적·경제적 필요성

그러나 핵잠수함 전력의 구축과 유지에는 선체와 원자로 그 이상이 요구된다. 한국은 핵연료주기 전 단계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 즉,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연료를 생산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새로운 핵연료를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군사 및 민수 원자력 산업 모두 외국의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완전한 핵연료주기 접근은 한국의 민수 원자력 산업에도 중요한 이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전력의 약 3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첨단 원자로 생산에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보할 경우, 고순도 저농축우라늄(HALEU) 생산,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차세대 원자로용 첨단 핵연료 개발과 같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의 한국의 역할이 크게 강화 될 것이다.

또한 한국에 핵연료주기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전략적 필요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 및 정책적 일관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원자력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능력이 없어

핵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문제는 보다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은 핵연료의 약 3분의 1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러 제재로 인해 2028년부터는 러시아산 핵연료 구매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불과 2년 후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연료 부족과 비용 급등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어떠한 논리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5위의 원전 운영국임에도, 국내 농축 능력 부재로 인해 농축우라늄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비교 사례가 있다. 일본, 네덜란드, 독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여러 비핵무기국이 이미 IAEA 안전조치 하에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이 두 가지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해 왔다.

따라서 핵비확산조약(NPT)의 모범적 준수국이자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인 한국에게 핵연료주기 전체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 이를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것과 비교할 때 비합리적이며 생산적이지 못한 처사이다.

핵연료주기 접근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 한국은 급증하는 사용후핵연료 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기존 우라늄 자원에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추출하며, 차세대 원자로용 첨단 핵연료를 생산하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등 폐쇄형 핵연료주기 기술을 통해 폐기물 양을 최대 90%까지 줄이고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약 30년간 첨단 핵연료 재처리 기술, 특히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1997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목표는 재래식 원자로의 사용후핵연료를 차세대 고속로에 적합한 고성능 금속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동시에, 핵폐기물의 부피와 장기 독성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것이다.

최근의 이재명-트럼프 핵협력 합의는 이러한 노력에서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을 제공했다. 미국이 한국의 국내 우라늄 농축과 함께 평화적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추진을 명시적으로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그간 한국의 핵연료주기 역량 강화를 가로막아 온 법적·외교적 장벽을 사실상 해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KAERI의 파이로프로세싱 프로그램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공학 규모의 시범 운영 단계로, 나아가 2030년대에는 상업 규모 구현 단계로 전환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차세대 소듐냉각 고속로와 연계된 첨단 파이로프로세싱 시설 건설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핵협력의 정책적 과제

이번 한미 정상간 합의가 위에서 언급한 한국 원자력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나, 평화적 핵기술 공유에 관한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의 일부 조항은 여전히 개정이 필요하다.

미 해군의 핵추진 기술을 한국에 이전하는 것은, 신규 잠수함을 처음부터 건조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호주의 AUKUS 협정보다

한 단계 진전된 접근이 될 것이다. 한미 잠수함 협력 하에서 한국은 이미 검증된 KSS-III 설계를 기반으로 핵추진잠수함을 보다 신속하게 저비용으로 건조할 수 있다. 또한 공동생산이나 기술공유 방식은 생산과 정비 측면에서 수 년 뒤쳐져 있는 미국 잠수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서울을 방문한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Ami Bera) 하원의원은 한미 잠수함 협력이 왜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한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한국의 조선업은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미국 조선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물론 비평가들은 핵확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모범 회원국이다. 반면 북한은 핵 관련 조약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약 50기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핵추진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한국에게 필요한 핵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책임 있는 비확산 정책이 아니라, 전략적 실책이 될 것이다.

AUKUS와 유사한 프레임을 기반으로 하되,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방식이 안전성, 보안, 비확산 기준을 유지하면서 한국에 핵심 핵기술을 제공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핵기술 협력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산업 역량과 전략적 필요, 그리고 동맹으로서의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 미국은 첫 걸음을 내딛었다. 남은

문제는 이행의 속도(speed)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하여 한국에 해군 핵추진 기술 전반, 원자로 설계 지원, 핵연료주기 협력, 그리고 소형모듈원자로(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자로 개발 경로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포괄적인 한미 핵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분쟁 억지와 평화·안보·번영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1972년에 중국에 갈 수 있었던 인물은 오직 리처드 닉슨뿐이었다. 마찬가지로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 최초의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고 핵연료주기 협력이라는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은,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이었을 뿐일 가능성이 크다.

프레드 플라이츠(Fred Fleitz)는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현재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며, 서울 소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연구자문위원 및 워싱턴 D.C. 소재 첨단 원자력 기술 스타트업 Curio의 자문위원회 위원이다. 저서로는 텍사스 A&M 대학교 출판부에서 최근 출간된 『North Korea, Nuclear Brinkmanship, and the Oval Office(북한, 핵위기 외교와 백악관)』이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Time to Act Quickly on the Bold Lee/Trump Nuclear Technology Agreements

It is urgent that the US act now to deliver full nuclear propulsion and fuel cycle technology to South Korea

Fred Fleitz

(Vice Chair,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 Member of Research Advisory Committe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A South Korean scholar recently told me that President Lee Jae-myung's enthusiastic support for transformative nuclear technology agreements with the United States represents a "Nixon goes to China" moment.

What he meant was that, just as Richard Nixon—the lifelong anti-communist—made the landmark decision in 1972 to dramatically shift U.S. policy and normalize relations with Beijing, President Lee, a progressive leader, has broken with traditional left-leaning positions by striking major strategic deals with the U.S. to build 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s (SSNs) and to cooperate on uranium enrichment and the peaceful reprocessing of nuclear fuel.

Lee's move was bold not only because it defied South Korea's vocal anti-nuclear lobby, but also because it risked complicating his goal of improv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President Lee Jae-myung also has built a pragmatic, transactional, and productive relationship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that surprised many critics. Despite ongoing frictions over tariffs and defense burden-sharing, the two sides have significantly deepened cooperation in defense, advanced nuclear technology, and regional security.

The personal rapport between Trump and Lee was evident during Lee's visit to the White House in August 2025 and their productive summit on the sidelines of the APEC meeting in Gyeongju in October 2025.

President Trump also held a constructive meeting with Prime Minister Kim Min-seok in Washington in March 2026. That session helped advance South Korea's \$350 billion investment commitment in the United States, maintained momentum on the bilateral trade agreement, and included useful discussions on the possibility of Trump re-engaging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President Lee's push to elevate Sou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came at a critical time. In December 2025,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inspected the completed hull of an 8,700-ton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missile submarine" at a shipyard, hailing it as a major step in Pyongyang's naval nuclear program.

The Lee-Trump nuclear agreements were a long-overdue recognition of a strategic reality: in an era of nuclear-armed adversari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rapidly modernizing Chinese navy, South Korea cannot deter aggression with diesel-electric submarines alone.

For decades, Seoul has operated some of the world's most sophisticated conventional submarines. South Korea's KSS-III-class subs are quiet, heavily armed with vertical-launch cruise and ballistic missiles, and equipped with advanced air-independent propulsion. They represent a remarkable indigenous achievement. South Korea has offered to sell a version of the KSS-III submarine, the KSS-CPS, to Canada.

However, diesel-electric submarines have significant limitations. Range and time at sea are limited by their diesel fuel. These subs must periodically surface to recharge their batteries, limiting their time submerged to days or weeks at best. In the shallow, confined waters around the Korean Peninsula—and in any broader Indo-Pacific

contingency—the KSS-III subs are vulnerable to detection and cannot sustain the persistent, high-speed patrols required for naval deterrence today.

South Korean nuclear-powered submarines can change that equation. An SSN can remain submerged for months, travel at sustained high speeds, and operate across vast distances without fuel constraints. For South Korea, this capability is a necessity. North Korea’s growing fleet of ballistic-missile submarines already threatens to complicate Seoul’s defense planning. Beijing’s expanding submarine force, designed to project power far beyond the first island chain, poses an even larger challenge.

The good news is that South Korea is more than ready for this ambitious leap into nuclear-powered submarines. Its renowned “Big Three” shipbuilders – HD Hyundai Heavy Industries, Samsung Heavy Industries, and Hanwha Ocean – stand among the world’s top-tier shipbuilding giants. Collectively, they command a dominant position in high-value, technologically advanced vessels, including LNG carriers, offshore platforms, and sophisticated naval platforms.

These companies already design and construct world-class conventional submarines, most notably the KSS-III, and have invested heavily in US shipyards. This includes Hanwha Ocean’s acquisition of the historic Philly Shipyard in Philadelphia and is committing billions of dollars – including a \$5 billion modernization program – to dramatically expand its capacity.

Transferring US naval nuclear propulsion technology would help bring South Korea’s already advanced shipbuilding industry to the next level.

However, building and sustaining a nuclear submarine fleet requires far more than hulls and reactors. South Korea must gain access to the full nuclear fuel cycle: the ability to enrich uranium to produce nuclear fuel and to reprocess spent fuel rods into advanced nuclear

fuel. Without this, both its submarine program and civilian nuclear industry would remain dependent on foreign suppliers.

Access to the full nuclear fuel cycle would also be a boon to South Korea's broader civilian nuclear ambitions. South Korea relies on nuclear power for about 30 percent of its electricity. It is also a leading producer of advanced nuclear reactors. Granting South Korea access to enrichment and reprocessing would boost its efforts in next-generation nuclear power technology, such as the production of high-assay low-enriched uranium (HALEU) and advanced nuclear fuel needed for Small Modular Reactors (SMRs) and new reactor designs.

Moreover, providing South Korea with access to the full nuclear fuel cycle is not only a strategic imperative but also a matter of basic fairness and logic.

South Korea operates one of the world's most advanced civilian nuclear industries. Yet it cannot enrich uranium to make nuclear fuel rods or reprocess spent fuel and must import all of its nuclear fuel.

Making this much worse, not only does South Korea import about a third of its nuclear fuel from Russia, US sanctions against Russia in response to the war in Ukraine will force it to stop buying nuclear fuel from Russia in 2028. This means South Korea's nuclear industry is facing nuclear fuel shortages and much higher fuel costs in just two years.

None of this makes any sense. Although South Korea is the fifth largest operator of nuclear power plants, after the U.S., China, Russia, and France, it is the only one entirely dependent on overseas suppliers for its enriched uranium because it lacks the domestic capability to enrich uranium.

And another astonishing fact: several other non-nuclear weapon states—including Japan, the Netherlands, Germany, Brazil, and Argentina—already possess uranium enrichment and fuel rod

reprocessing capabilities under IAEA safeguards. Meanwhile, North Korea has secretly developed both technologies in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therefore is both illogical and counterproductive to withhold full nuclear fuel cycle rights from a model NPT member and steadfast US ally like South Korea while granting or tolerating them for so many other nations.

Access to the full nuclear fuel cycle also would allow Seoul to sharply reduce its growing spent fuel stockpiles, extract vastly more energy from existing uranium resources, cut waste volumes by up to 90 percent through closed-fuel-cycle technologies like pyroprocessing to recycle spent fuel rods to produce new advanced nuclear fuels for next-generation reactors.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has been actively developing advanced nuclear fuel reprocessing technologies – primarily pyroprocessing – for nearly three decades, with serious R&D efforts underway since 1997. The goal has long been to recycle spent fuel from conventional reactors into new, high-performance metallic fuels suitable for next-generation fast reactors, while also dramatically reducing the volume and long-term toxicity of nuclear waste.

The recent Lee-Trump nuclear agreements mark a major breakthrough in this effort. For the first time, the United States has explicitly expressed support for South Korea's pursuit of peaceful spent fuel reprocessing alongside domestic uranium enrichment. This effectively removes the longstanding legal and diplomatic barriers that previously restricted South Korea's fuel-cycle ambitions.

As a result, KAERI's program can now transition from the R&D phase to engineering-scale demonstration and eventual commercial-scale implementation in the 2030s. This paves the way for South Korea to build facilities such as an advanced

pyroprocessing plant linked to next generation sodium-cooled fast reactors.

Although the new US-South Korea nuclear agreements support these advances in South Korea's nuclear power program, some revisions still need to be made to the US-South Korea "123 agreement" on the sharing of peaceful nuclear technology.

Transferring US naval nuclear propulsion technology would be an improvement on Australia's AUKUS agreement, which focuses on building new submarines from scratch. By contrast, under the US-South Korea submarine agreement, Seoul can quickly and cost-effectively build a nuclear-powered variant of its proven KSS-III design. Joint production or technology-sharing arrangements also would strengthen America's own submarine industry, which is years behind in production and maintenance.

During his recent trip to Seoul, Democratic Congressman Amu Bera acknowledged why the U.S./South Korea submarine agreement is vital to US national security when he said, "Korean shipbuilding is far ahead of where U.S. shipbuilding is, and we need Korean companies to help revitalize American shipbuilding."

Naturally, critics have raised nonproliferation concerns. These concerns are unwarranted. South Korea is a model member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North Korea, by contrast, has blatantly violated its nuclear treaty obligations, has constructed an estimated 50 nuclear weapons, and is now reportedly building nuclear-powered submarines. Denying South Korea the nuclear technology it needs to defend itself while North Korea races ahead is not responsible nonproliferation; it would be strategic malpractice.

An AUKUS-style framework with updates to the US-South Korea 123 agreement is the best way forward to provide Seoul with critical nuclear technology while ensuring safety,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standards.

South Korea has the industrial capability, the strategic need, and the alliance commitment to make this new nuclear technology cooperation work. The US has taken the first step. The only remaining question is speed. The Trump administration, in consultation with Congress, should expeditiously provide South Korea with the full suite of naval nuclear technology, reactor design support, fuel-cycle cooperation, and pathways for advanced reactors, including SMRs.

In the face of growing threats from China and North Korea, a comprehensive U.S.-South Korea nuclear partnership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deter conflict and promote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Only Richard Nixon could go to China in 1972. Perhaps only Lee Jae-myung could go to Donald Trump in 2025 and secure the historic nuclear propulsion and fuel-cycle agreements that will give South Korea its first nuclear-powered submarines and dramatically elevate its nuclear industry.

Fred Fleitz previously served as Chief of Staff of the Trump National Security Council. He is vice chair of the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and an advisory board member of Curio, a Washington, DC-based startup specializing in advanced nuclear power technologies. He is the author of North Korea, Nuclear Brinkmanship, and the Oval Office, which was just released by Texas A&M Press.